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조례 제1675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1번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옥서면 선연리 송촌란 4반 “앞고개땀 일원”을 “별표 1번”과 같이 새로운 분리명 신송촌란 1반 “앞고개땀 일원”으로 한다.

별표(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2번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미장동 17통과 77통의 관할구역”을 “별표 2번”과 같이 조정하고, “나운3동 43통, 46통, 47통, 48통, 49통, 50통의 조정 및 58통 관할 구역 신설”을 “별표 3번”과 같이 한다.

[별 표 1]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옥서면	선연리	송촌	1	송촌	서술밭땀 일원
			2	“	동술밭땀 일원
			3	“	진고개 일원
		신송촌	1	신송촌	앞고개땀 일원
면 계	2	25	71		

[별 표 2]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미장동	17	1	380의 9~22, 381의 67~120
		2	381의 1~13, 54~58, 69, 381의 27,35, 382의 1~30, 383, 384의 1~5
		3	399의 1~10, 400, 401, 402의 1~4, 404~406, 410, 413~418, 52의 32, 270, 389, 394의 1~4, 395의 3~47
		4	485~557
	77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1~3호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4~6호
		3	558 미장대원칸타빌 104동
		4	558 미장대원칸타빌 105동
		5	558 미장대원칸타빌 106동
	동 계	77	317

[별표 3]

동 명	통	반	관 할 구 역
미룡동	43	1	59-118 은파롯데캐슬아파트 101동, 102동
		2	59-118 은파롯데캐슬아파트 103동, 104동
		3	59-118 은파롯데캐슬아파트 105동
		4	59-118 은파롯데캐슬아파트 106동
	46	1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층~5층
		2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6층~10층
		3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1층~15층
		4	851, 852의 4~5, 852의 8~10
	47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층, 상가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2층~4층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5층~7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8층~10층
	48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1층~12층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13층~14층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15층~16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17층~18층
		5	860, 861, 864
미룡동	49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층~4층, 상가
		2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5층~8층
		3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9층~12층
		4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3층~15층
		5	856, 865
	50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6층~18층
		2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1층~6층
		3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7층~18층
		4	854의 3, 854의 6, 854의 7, 854의 9, 855
	58	1	842
		2	843~844
		3	846~847
		4	849, 850, 853, 486~495
동 계	58	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1.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행					개정안						
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옥서면	옥봉리	1~13			옥서면	옥봉리	1~13	현행과 같음			
	선연리	송촌 (14)				1	서술밭뜸 일원	선연리	송촌 (14)	1	서술밭뜸 일원
						2	동술밭뜸 일원			2	동술밭뜸 일원
						3	진고개 일원			3	진고개 일원
			4	앞고개뜸 일원		신송촌 (25)	1			앞고개뜸 일원	
			15~24					15~24	현행과 같음		
계		24분리	71반		계		25분리	71반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할구역
수송동	1~16			수송동	1~16	현행과 같음	
미장동	17	1	380의 9~22, 381의 67~120	미장동	17	1	현행과 같음
		2	381의 1~13, 54~58, 69, 381의 27, 35, 382의 1~30, 383, 384의 1~5			2	현행과 같음
		3	399의 1~10, 400, 401, 402의 1~4, 404~406, 410, 413~418, 52의 32, 270, 389, 394의 1~4, 395의 3~47			3	현행과 같음
	17	4	485~558		17	4	485~557
	77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1~2호		77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1~3호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3~4호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4~6호
		3	558 미장대원칸타빌 104동			3	현행과 같음
		4	558 미장대원칸타빌 105동			4	현행과 같음
		5	558 미장대원칸타빌 106동			5	현행과 같음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18~72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18~7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구역	통	반	관할구역	
미룡동	43	1	59-118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1동, 102동	43	1	59-118 은파롯데캐슬아파트 101동, 102동	
		2	59-118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3동, 104동		2	59-118 은파롯데캐슬아파트 103동, 104동	
		3	59-118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5동		3	59-118 은파롯데캐슬아파트 105동	
		4	59-118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6동		4	59-118 은파롯데캐슬아파트 106동	
	46	1	852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층~4층	46	1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층~5층	
		2	852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5층~8층		2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6층~10층	
		3	852산북3차부향하나로아파트 9층~12층		3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1층~15층	
		4	852 산 북 3 차 부 향 하 나 로 아 파 트 13층~15층		4	851, 852의 4~5, 852의 8~10	
	47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층, 상가	47	1	현행과 같음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2층~4층		2	현행과 같음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5층~7층		3	현행과 같음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8층~9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8층~10층	
	48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0층~12층	48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1층~12층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13층~14층		2	현행과 같음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15층~16층		3	현행과 같음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17층~18층		4	현행과 같음	
		5	842~865		5	860, 861, 864	
	49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층~4층	49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층~4층, 상가	
		2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5층~8층		2	현행과 같음	
		3	857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9층~12층		3	현행과 같음	

50	4	857미룡2차대명아파트 202동 13층~15층	50	4	현행과 같음
				5	856, 865
	1	857미룡2차대명아파트 202동 16층~18층	50	1	현행과 같음
	2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1층~6층		2	현행과 같음
	3	854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7층~12층		3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7층~18층
	4	854미룡3차대명아파트 203동 13층~18층		4	854의 3, 854의 6, 854의 7, 854의 9, 855
			58	1	842
				2	843~844
				3	846~847
				4	849, 850, 853 486~495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조례 제1676호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資力)”를 “(資力)이”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 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을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으로, “고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로,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

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8조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 중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을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으로,
“위반됨”을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별지 서식(사회재난 피해신고서)”을 “별지(사회재난 피해신고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유선전화	() -	통신사명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확정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① ② ③ ④
	신고	① ② ③ ④
	확인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산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산시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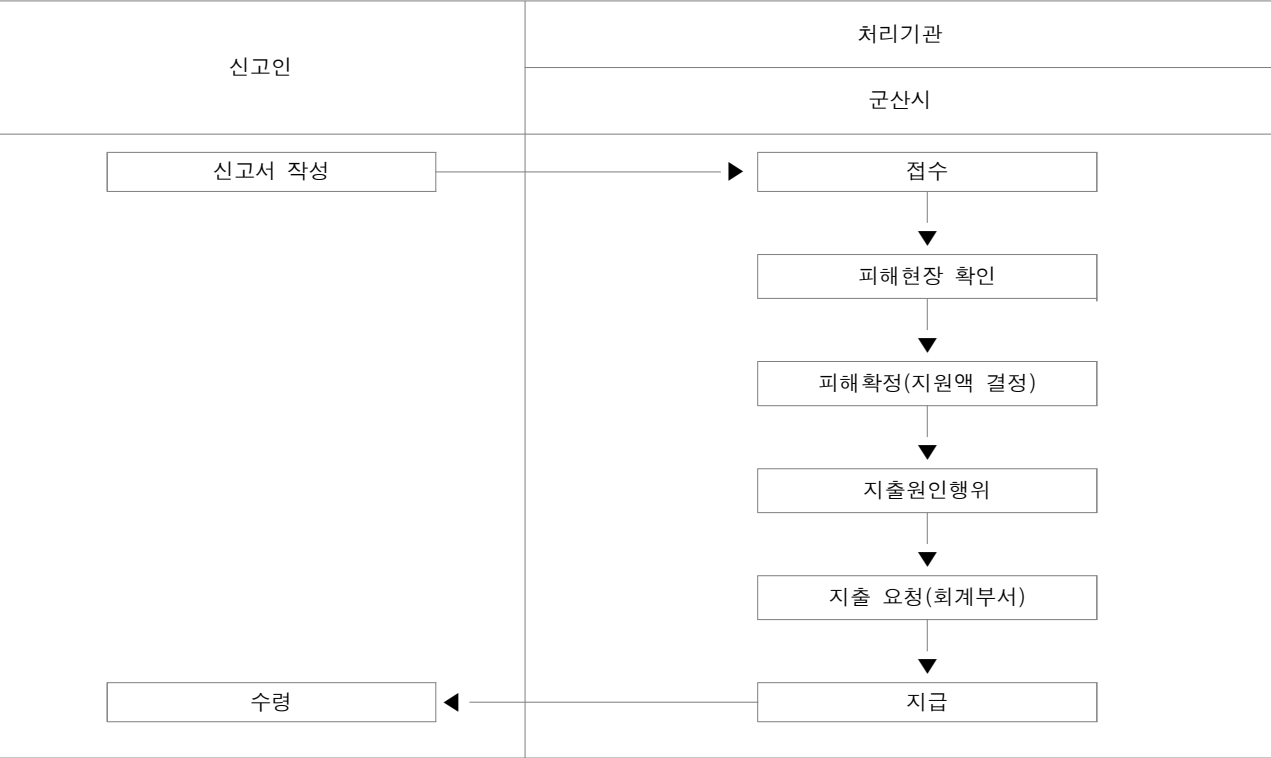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결정)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u> (이하 " <u>재난피해자</u> "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결정) ① ----- ----- ----- ----- ----- ----- ----- ----- ----- ----- <u>피해</u> <u>주민</u> ----- ----- -----.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u>자력(資力)</u> 없는 등으로 인하여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 ----- <u>(資力)</u> 이 -- ----- <u>피해주민</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 <u>피해</u> <u>주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u>영 제4조제2항</u>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u>고시</u> 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u>산정기준</u> , <u>피해상황</u> , <u>재정 여건</u>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u>확정한다</u> . <신설> <신설>	제4조(지원기준) ① ----- ----- ----- <u>피해주민</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u>피해상황</u> , <u>재정 여건</u> , <u>영 제4조제2항</u> ----- <u>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u> ----- ----- <u>산정기준</u> 등을 고려한 <u>비용으로 한다</u> .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u>장례비</u> : <u>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 2. <u>치료비</u> : <u>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신 설></u></p>	<p><u>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u>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u></p> <p><u>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p>제5조(중복지원 금지) <u>재난피해</u>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u>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u>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중복지원 금지) <u>피해주민</u>-----</p> <p>-----</p> <p>----- <u>원인</u></p> <p><u>제공자</u>-----</p> <p>-----</p> <p>-----</p> <p>-----</p> <p>-----.</p>
<p>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p>	<p>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p>

현행	개정안
<p>① <u>생활안정지원</u> 및 <u>간접지원</u> (이하 "<u>생활안정지원</u> 등"이라 한다)은 해당 <u>재난피해자</u>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p> <p>② <u>생활안정지원</u> 등을 받으려는 <u>재난피해자</u>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재난피해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④ (생략)</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u>재난피해자가</u>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u>재난피해자의</u>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p>	<p>① <u>생활안정지원</u>, <u>간접지원</u> 및 <u>장례비·치료비 지원</u>----- ----- <u>피해주민</u>----- -----.</p> <p>② ----- <u>피해주민</u>은 ----- ----- ----- -----.</p> <p>③ ----- <u>피해주민</u>이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피해주민</u>이 ----- ----- ----- <u>피해주민</u>의 ----- ----- -----</p>

- 17 -

개 정 안

[별스 서식]

[illegible][illegible]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조례 제1677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관리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국장
2.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도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할 때 도 조례 제16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도 조례 제19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도 조례 제1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도 조례 제17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도 조례 제18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관련된 사항은 도 조례 제21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1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가족(동거인) 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군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297mm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동지원센터 (☎ 445-11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수 신 : ○○○ 귀하(○○동 ○○번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영구장애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장애 ()	
차량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input type="checkbox"/> 일반 차량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사유					

년 월 일

군산시장(군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장) (인)

210mm×297mm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조례 제1678호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군산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 활동과 민주적 소통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문화 다양성 추구, 시민민주주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마을미디어 활동 및 운영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을미디어활동 지원)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 미디어관련 전문가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가 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조례 제1679호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된 지역서점의 문화프로그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 ①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2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거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다.

②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의 공간(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
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③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
2.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
3.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운영

④ 생활문화시설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방문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인정 유효기간) 생활문화시설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인정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9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화/e-mail)
대상 서점 및 시설 개요	상 호	위치(주소)		영업 개시일
	전체면적 / 전용면적		문화활동 공간(면적)	설비 현황
	㎡ / ㎡		㎡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6호, '18.3.9)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 서점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 별첨

년 월 일

○○서점 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

제 호

군산시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지정서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2년)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따라 군산시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조례 제1680호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보상사업) 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운전면허 반납일		보상금 수령		<input type="checkbox"/> 지역화폐						
운전면허 반납기관		(해당란에 V 체크)		<input type="checkbox"/> 교통카드							
<p>「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군산시장 귀하</p>											
구비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문 1부.										
<p>『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style="width: 33%;">수집·이용 항목</th> <th style="width: 33%;">수집·이용 목적</th> <th style="width: 33%;">보유기간</th> </tr> <tr> <td>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td> <td>자진반납자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우편발송</td> <td>신청시부터 3년</td> </tr>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p>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자진반납자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우편발송	신청시부터 3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자진반납자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우편발송	신청시부터 3년									

..... 절 취 선

접 수 증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접수기관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관명		보상금 수령	<input type="checkbox"/> 지역화폐 <input type="checkbox"/> 교통카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반납 및 지원신청 <small>(군산경찰서)</small>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운전면허 취소 결정 <small>(지방경찰청)</small>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지원신청자 취합·통보 <small>(군산경찰서)</small>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등기교부 <small>(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small>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지원 완료 </div> </div>					
<p>「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접수자 _____ (서명 또는 인)</p>					
※ 예산이 있을 시 30일 이내 지원되며, 예산소진 시 차후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조례 제1681호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 1의 대상 지역의 일부제한지역란 중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
으로 부터”를 “지역으로, 인근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제3조제2항)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p>○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 2,000미터 이내 - 닭·오리·메추리·개 : 1,000미터 이내 - 소·젖소 : 500미터 이내 - 양·사슴 : 300미터 이내 - 말 : 200미터 이내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생략)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증설에 대하여 100분의 90이상 동의하는 경우. 단,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나 변경허가(변경신고)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개정.2018.07.12.></u>	<u><삭 제></u>
7. (생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조례 제1682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목적 또는”을 “목적 또는 제2항제4호 외의”로 한다.

4. 농지이용시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1호 가목 및 마목」의 시설을 말한다.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받는 시설은 제외한다.)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별표 25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원순환시설”을 “고물상”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의 지역에 입지한 농지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가 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은자,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변경 안)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며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나.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 자연취락지구를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다. “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라.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마. “공공시설”이란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항, 공공청사를 말한다.

바. “문화재”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사.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사업장 부지 반경 200미터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설명회를 권고 할 수 있다.

가. 주요도로에서 15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가 다른 경우도 면적 포함)이 될 경우에는 300미터 적용

다.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어촌공사 관리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바. 발전시설 부지내 배수계획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구조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사지를 두어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사.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가 다른 경우도 면적 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군산시민(군산시에 계속하여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으로
발전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기준을 30% 완화하며, 본인 소유토지(5년 이상 소유)에 신청할
경우 50%완화 적용.(단, 해당가구 80%이상 동의시 가능)

3. 폐차장 및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동지역은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가.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대지경계선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2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수목
식재할 것

바. 비가림 시설 설치를 통하여 강우시 빗물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강수가 농수로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사.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지역에 입지한 농지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가 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생략)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농지이용시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 가목 및 마목」의 시설을 말한다.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적용한다. 1. (생략) 2. 산업단지 내 설치 및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u>목적 또는 제2항제4호 외의</u> - ----- ----- -----.

[별표 25] 신·구 조문대비표

(별표) 현 행	(별표) 개 정 안
<p>3. 폐차장 및 <u>자원순환시설</u>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 합하여야 한다. 단 동지역은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p> <p>가. ~ 사. (생 략)</p> <p><u><신 설></u></p>	<p>3. ----- <u>고물상</u>----- ----- ----- -----.</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4. 제2호의 지역에 입지한 농지 <u>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u> <u>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u> <u>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u> <u>합하여야 한다. 단, 자가발전</u> <u>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u></p> <p>가. <u>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u> <u>이 지난 후 전기사업허가</u> <u>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u> <u>야 한다.</u></p> <p>나. <u>가목의 전기사업허가 및</u> <u>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물</u> <u>사용승인 후 3년간의 영농</u> <u>기록(농산물 생산· 판매</u> <u>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u> <u>다.</u></p>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0월 01일

군산시 규칙 제688호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4.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4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3.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최근 4년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 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 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요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 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써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④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⑤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를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 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
- ⑦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사 착수 전 준수사항

-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조사 진행 중 준수사항

- ①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조사 사유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③ 세무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⑨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⑩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에게 수고가 많았음을 인사하고, 다음날 몇 시에 다시 오겠다는 뜻을 전달하여야 하고, 약속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⑫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결과보고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 종결시 준수사항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의 종결 즉시 종결결과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시 “세법등 개정건의서”를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결과 타 기관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 관할청에 즉시 통보한다.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div>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div> <div>년</div> <div>월</div> <div>일부터</div> <div>년</div> <div>월</div> <div>일까지</div> </div>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군산시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관리현장 제공)

○ 법 인 명 : (인)	법인유형	주요 목적사업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제조업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건설업 ()	
년 월 일까지 (제 기)	판매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운송업 ()	
(전 화) (팩스)	기 타 ()	
○ 제출일자 :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군산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군산시청)

군산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54078

※ 문의사항 전화 : (063) 454-245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o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 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 식 목 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단위 : 원)

사업 년도		사업장	도 시 · 군 로 (읍·면·동)	사업장명	
----------	--	-----	--------------------	------	--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가납부 세 액	납부 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그 밖의 소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등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군산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㉔)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㉕(㉔-㉖)	②정당 세액 (㉗)	기납부 세 액 (㉘)	납부 일자	차인세액 ㉙(㉗-㉘)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㉖)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군산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군산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③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⑥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④=(③-⑥)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④×(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지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군산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illegible]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u>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u>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u>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u>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u>질문·검사권으로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u>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 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2017.07.03.>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u>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u>
2. "조사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u>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 세무공무원을 말한다.</u>	2. "조사공무원"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u>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u>
<신설>	3. " <u>조사책임자</u> "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p>3. <u>"일반조사"란 특정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4. <u>"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5. <u>"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6. <u>"서면조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신설></p> <p><신설></p>	<p><u>말한다.</u></p> <p>4. <u>"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5. <u>"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6. <u>"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7. <u>"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8. <u>"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p>9. <u>"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u></p>
--	--

7. "전자신고"란 조사대상 납세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알린 사항에 어긋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조사공무원(상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

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거나, 공표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의 사무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면 도지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제조장·직매장·하치장 등

(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이상 시·군·구와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4.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면 시장은 세무조사의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으면 신속히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시·군·구와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조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

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신고 존중)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일반조사대상자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 관리 상황과 서면신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납세자에 대하여 중복조사의 방지, 신고납부 풍토의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일반조사대상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의사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서면조사대상자 또는 전자신고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
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p>④ <u>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직전 조사기간 이후에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직전 조사기간 이후에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5.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p>⑤ 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p>	<p>③ <u>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u></p> <p>④ <u>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u>경우</u> 2. <u>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u> 3. <u>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u> 4. <u>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u> 5. <u>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⑤ <u>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u></p>
---	---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한 때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때

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신설>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

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

<p>제13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u>면제대상자</u>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3년간 <u>면제</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취득가액 3억원 미만</u>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u>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u>) 	<p><u>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u></p> <p>5. <u>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u></p> <p>6. <u>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u></p> <p>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u>유예대상자</u>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u>유예</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최근 4년간 3억원 미만</u>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u>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u>」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3. 「<u>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u>」 제4조에 따라 <u>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u>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u>최근 4년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u>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하는 자에게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4조(중복조사 금지) ① 같은 납세자에게 일반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의 혐의가 있거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1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조사기간·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신설>

<신설>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

	<p>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p> <p>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p> <p>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p>
<p><u>제16조(조사장소의 한정)</u>세무조사는 <u>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u>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u>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u> 세무조사는 <u>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u>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제17조(조사시간의 제한)</u>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일과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p>	<p><u>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u> <u>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u>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제18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 신청)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07.0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면 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때
2.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p> <p>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p> <p>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p> <p>4.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p> <p><u>제19조(조사기간)</u>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작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p> <p><신설></p> <p><u>제20조(조사기간의 연장)</u>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기한까지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은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p> <p>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p> <p>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p> <p>4.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u>제23조(조사기간)</u>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p> <p><u>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u>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p> <p><u>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u>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에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p>
---	--

제21조(수색·영치의 금지)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않은 일반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1. 진행 중인 범칙 행위를 발견할 때
 2. 비밀장부 등 범칙 증거를 발견할 때
-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영치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치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장부·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

예치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세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이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25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세무조사대상자별 세무조사 계획

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은 조사기간 · 조사범위 · 조사방법 · 조사장소 및 조사 시작 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책임자가 직접 수립한다.

제26조(법인명부 관리)

- ①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 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적은 법인명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고납부 내용
 - 2. 전산 분석자료
 - 3. 행정기관 보유자료
 -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공무

수립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고납부 내용
 - 2. 전산분석 자료
 - 3. 행정기관 자료
 -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조사의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를 지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9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제32조(부분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 서식)를 휴대하고,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3>

<신설>

제30조(조사 결과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로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조사 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에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상황을 조사 중간보고서로 시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
3. 시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때

제31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① 세무

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
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
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
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
항을 빠짐 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들어
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
거서류를 확보하고, 다툼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

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
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
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
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
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
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

<p><u>제32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때</u> <u>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u> <u>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때</u> <u>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u> 	<p><u>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u></p> <p><u>제38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u> <u>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u> <u>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u> <u>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u>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u> <u>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u> <u>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u>
---	--

<p>제33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u>세무조사 과정에서</u> 파악되는 여러 가지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u>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u></p> <p>4. <u>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u></p> <p>5. <u>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u></p> <p>6. <u>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u></p> <p>제39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u>조사과정에서</u>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u>시장과 도지사</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p> <p>① <u>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u></p>
--	---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
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명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회수하여 파
기하여야 한다.

<개정2017.07.03.>

-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
수칙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5.04.25 규칙제 088호)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
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
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
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
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31 규칙제 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0 규칙제 3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9.16 규칙 제4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11.01 규칙 제4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
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
시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동안
적용한다.

부 칙(2011.04.01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간) 제13조제1항제4호 규
정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
제받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경
우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7.07.03 규칙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군산시 지방
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제2조제1호, 제34조제①
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나. 제18조제①항 중 “법 시행령 제
92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54조제
1항”으로 한다.

다. 제29조제②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을 “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 서
식”으로 한다.

공 고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인 「군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안 제5조의2)
-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10조제1항)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임시시장은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신고취소 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수권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에서 임시시장 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큼으로 삭제(안 제17조 삭제)
- 상인회에게 상인회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배로 삭제(안 제20조 제3항 삭제)
-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21조 제1항, 제2항)
- 상위법령에 상인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조례로 위임한 수권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로 상인회에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 될 수 있어 삭제(안 제25조제1항, 2항)
-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사유를 법에 규정 되어 있음에도 법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를 조례로 상이하게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개정(안 제27조제1항)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 횟수 및 조건을 규정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안 제32조제1항, 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징수절차관련 운용규정」 제5조에 위배 되므로 개정(안 제4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9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468@korea.kr
-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7층 지역경제과
- 3) 팩스 : 063-454-26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전화 : 063-454-27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이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을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의”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한다.

① 군산시장은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산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하고,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3조 및 제34조로 하며,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 횟수는 군산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

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다.

제34조 앞에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를 삽입한다.

제40조(종전의 제39조) 중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u>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이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산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u> 군산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u>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u></p> <p>2. <u>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u></p>	<p><u><삭 제></u></p>

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
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
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
산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
산시장은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 제2조
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산시장은 그 내용을 군
산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
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산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
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산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② ----- 제1항-----

-----.

<삭 제>

1. 법 제11조 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생략)

<신설>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산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 횟수는 군산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
다.

제32조 · 제33조 (생 략)

제33조 · 제34조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와 같음)

제8장 과태료 부과 · 징수

<삭 제>

제34조 ~ 제38조 (생 략)

제35조 ~ 제39조 (현행 제34조부
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장 과태료 부과 · 징수

제3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준용 규정) -----

-----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

제40조 (생 략)

제41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9-1786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경합동묘지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을 정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예성 훼손자의 안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1년 계속 거주) 규정(안 제3조제1항)
- 안장대상자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1호)
- 안장대상자의 영예성 훼손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lsauid12@korea.kr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3층 주민생활지원과
- 팩스 : 063-454-30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063-454-4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안장대상)”을 “(안장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가 목, 나목에 따른 대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군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제4조제1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접하여”를 “잇닿아”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을 “적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여”를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거시킬”을 “나가게 할”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를 “해”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3조의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군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안장대상) ① 사망 당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배우자로 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p> <p>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p> <p>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자</p> <p>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로 사망한 자</p> <p>② (생략)</p> <p><신설></p>	<p>제3조(안장대상자) ①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서 ----- -----</p> <p>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가목, 나목에 따른 대상자</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군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p>

제4조(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규격) ① 묘비 및 상석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 1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표식을 하거나 임의로 구조의 변경 및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 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사용신고) ① 안장대상자를 군경묘지에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묘지에서 이장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최종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연접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취소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조(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규격) ① -----

--- 인공구조물-----.

② -----

----- 그
밖-----.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신고) ① -----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
달아 -----
-.

제7조(사용의 취소 등) ①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
야 한다.

1. (생략)

2.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
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
였을 경우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
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준엄 유지) ① 군경묘지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에 준엄을 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
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군경묘지 밖으로 퇴
거시킬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군경묘지 안에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현행과 같음)

2. -----
----- 인공구조물-----
--

3. (현행과 같음)

② -----

----- 적정-----

-.

제11조(준엄 유지) ① -----

해-----.

② -----

----- 나가게 할 ---
-.

제12조(금지행위) -----

----- 해-----.

1. ~ 4. (생 략)

<신 설>

제14조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3조의 안장대상자를 심사하
거나 군경묘지 영예성 훼손 여
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
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
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규 제 영 향 분 석 서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계장 이현현, 주무관 신명숙								
4. 근거법령명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국가유공자 안장 신청자								
6. 규제존속 기한	○ 조례 존속일까지 - 안장 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 적용하여야 함으로 기간 설정 곤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없음 《신설규제》 ○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규정 및 범죄경력자 제외 -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규정 : 1년 계속 거주 - 범죄경력자 안장대상에서 제외								
8. 기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군산군경합동묘지 운영 취지에 맞도록 군산시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안장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안장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 선양에 기여
- 군산시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군산군경합동묘지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안장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군산군경합동묘지의 운영취지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 선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

5. 경쟁 제한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 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으로 운영중인 현충원과 호국원의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지역 구분없이 안장 가능
- 군산 지역의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군산시 거주기간 제한은 적정한 규제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존속기한의 타당성 : 안장 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 적용하여야 함으로 기간 설정 곤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군산시 공고 제2019-1788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골의 임시 안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안장 월 1회 실시(안장식 날짜, 의식절차 규정) (안 제3조)
- 안장 의식 절차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규정 마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lsauid12@korea.kr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3층 주민생활지원과
- 팩스 : 063-454-30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063-454-4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골의 임시 안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경합동묘지에 안장하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공설봉안당(군산시 추모관)에 안치할 수 있다.

제3조(안장의 실시) ① 시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안장하고 비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은 시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월1회 행한다. 다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의식없이 안장할 수 있다.

③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합장의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제3조의 의식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 활 임 금 고 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6조에 의거 2020년 적용되는 군산시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군 산 시 장

1. 생활임금액

- 시간급 : 9,277원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

※ 적용제외

-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된 근로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

3. 적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군산시 고시 제2019 - 9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6.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9-0003호 (2019. 9. 25.)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미룡동)
 - 성명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③ 허가목적 : 해상풍력 터빈실증단지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및 선유도리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576m²
- ⑥ 허가기간 : 2019. 9. 25. ~ 2019. 12. 31.까지

■ 고시사항(군산시 건설과)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협의 2019-0003호 (2019. 8. 22.)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 성명 : 군산시청(건설과)
- ③ 허가목적 : 장자도 마을안길 정비공사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산9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0m²
- ⑥ 허가기간 : 2019. 8. 22. ~ 2019. 12. 31.까지

2019년 개별주택결정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군 산 시 장

1.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일: 2019. 9. 30.

나. 공시대상: 2019. 6. 1. 기준 개별주택 252호 결정가격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등(개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2. 이의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19. 9. 30. ~ 10. 30.

나. 제출자 및 장소: 주택소유자 등 / 시청(세무과), 읍·면·동

다. 제출방법: 기한 내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라.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3. 시행일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디오션시티 A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코리아신타(주)

나. 대 표 자 : 최익중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3. 시 공 자

가. 명 칭 : (주)삼호

나. 대 표 자 : 추문석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4.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1-20외 3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다. 대지면적 : 21,112m²

라. 건축면적 : 3,777.6015m²

마. 연 면 적 : 69,988.3331m²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의 423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423				
84A	민영주택	202	84.9427	24.5708	109.5135	
84B	민영주택	109	84.9585	26.1508	111.1093	
113	민영주택	110	113.8821	32.3346	146.2167	
143	민영주택	2	143.2304	44.8288	188.0592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23,777,496천원

차. 사업기간 : 2017년 9월 4일 ~ 2020년 3월31일

5. 주요변경사항

가. 에너지절약계획 및 친환경주택평가등 관련

나.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경미한 변경 등

6.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사업계획승인일 : 2019. 9.25.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9월 일

1. 사업명칭 :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
2. 사업목적 : 농촌 중심지의 경쟁력을 살려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향상 및 소재지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도모
3. 사업내용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무궁화문화복지센터, 구구팔팔센터, 공공서비스 거점정비
 - 나. 지역경관개선 : 무궁화 테마거리, 서수 공적터
 - 다. 지역역량강화 :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경영지원 등
4. 사업위치 :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일원
5. 사 업 비 : 5,814백만원 (균특 4,070 지방비 1,744)
6.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7. 사업효과 : 면 소재지 중심기능 및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조성으로 주민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 가로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농촌발전 거점 육성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9.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계		4,371	3,430			
1	서수면 서수리 771-1	임	2,545	1,842		국유지 (기획재정 부)	
2	서수면 서수리 771-4	임	1,560	1,322		국유지 (기획재정 부)	
3	서수면 서수리 746-3	전	266	266		국유지 (기획재정 부)	

※ 기본계획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063-454-360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
지사(063-440-5716)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회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9월 일

1. 사업명칭 :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
2. 사업목적 : 농촌 중심지의 경쟁력을 살려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향상 및 소재지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도모
3. 사업내용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너나들이 쉼터, 어울림센터, 통학로정비
 - 나. 지역경관개선 : 가로환경 정비
 - 다. 지역역량강화 :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경영지원 등
4. 사업위치 :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일원
5. 사 업 비 : 6,000백만원 (균특 4,200, 지방비 1,800)
6.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7. 사업효과 : 면 소재지 중심기능 및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조성으로 주민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 가로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농촌발전 거점 육성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9.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계		7,103	7,103			
1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1-5	임	7,103	7,10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강*규	

※ 기본계획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063-454-360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3)

「두사순·두정란 묘역」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공고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2015.04.30)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향토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1. 공 고 명 : 「두사순·두정란 묘역」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2.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명 칭	면 적(m ²)	소 재 지	비고
두사순·두정란 묘역	3,999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산 154-1	

나. 지정 사유

- 「두사순·두정란 묘역」은 조선시대 비인현감을 지낸 두사순과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을 지낸 두정란의 묘역으로 시대를 넘어 역사의 아픔과 선조의 정신을 볼 수 있는 유적임
- 문화유산보존과 애국충절 정신계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묘제 및 금석문 연구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음